

배포 2024. 9. 3.(화) 15:30

보도시점 (인터넷) 2024. 9. 4.(수) 회의 시작 시
(지 면) 2024. 9. 4.(수) 회의 시작 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안착과 글로벌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일괄(패키지) 규제 개혁으로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추진 현황 및 유학생 유치 성과 점검 결과, 2024년 유학생 20.9만 명으로 2022년 대비 25% 증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9월 4일(수)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1주기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안) >

교육부는 지역이 처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와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2조 원 내외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지자체는 지역대학과 함께 지역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 설계·추진

** 2026년까지 30개 내외 지정, 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 및 규제 특례 우선 적용 등 지원

2025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도입 예정인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영역에서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 대학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여 활동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은 라이즈의 성공적 안착과 글로벌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즈의 안착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협업을 확대한다.

시도 예산 배분 기준과 성과관리 등을 심의하는 (가칭)중앙라이즈위원회와 지역 라이즈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가칭)지역라이즈위원회 등을 법제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시도 특색에 따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을 개편**한다.

* 규제 특례를 통해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규제 특례 신청 주체를 초광역에서 시도로 전환, 특례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대학에서 수도권대학까지 확대

또한 정책 상승효과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하고, 라이즈를 통한 협업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 내 대학·산업계·출연연 간 상호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하여 여러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폭넓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지역 주력 산업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기업 채용 연계, 창업지원 등

둘째, 글로벌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요청에 기반하여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23년에 지정된 글로벌대학은 대학 간, 대학-산업체-연구기관 간 벽 허물기 등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함께 혁신 이행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우선, 대학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통합대학이 새로운 관리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종합대와 교육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하여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 양성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시 학사과정과 전문학사 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R&D부터 산업기능인력 양성에 이르는 지역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체 캠퍼스를 아우르는 위원회와 총장이 캠퍼스 특성화 계획·자원배분 등을 심의·결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캠퍼스총장제도를 신설하여 조직과 캠퍼스 내 학사·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

외부와의 벽 허물기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글로벌대학에 적용)를 활용하여 ▲국립대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하고 ▲검증된 인사를 주요 보직에 임기제로 영입한 경우 적절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을 지원한다. 이에 더하여 ▲검·초빙교원에 대한 정년 완화 및 공개 채용 절차 예외 적용으로 검증된 연구자·산업계 인사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에서 국립대도 교직원 성과급(인센티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을 위해 노력한 구성원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토대로 국립대의 혁신 동력을 확보한다.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시작으로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대학·지자체와 함께 라이즈·글로벌대학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1주기 점검 결과 >

정부는 글로벌 교육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 강국 도약’을 목표로 지난해 8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하였다.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주요 과제 >

① 유학생 유치 관문 확장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 개편, 유학생 유치 센터 설치, 비자 등 규제 혁신
② 지역 맞춤형 인재 유치	라이즈 연계 유학생 유치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축, 한국어 교육 강화 및 진로 탐색 지원, 지역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
③ 첨단·신산업 선도 인재 유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GKS, BK21 등), 영어 분야·강의 확대, 일자리 연결(매칭) 및 연구 활동·정착 지원
④ 유학 저변 확대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 글로벌 교류 강화, 잠재적 유학 수요 극대화
⑤ 범부처 협력·지원	유학생 유치 협업 체계 구축, 일괄(원스톱) 유학 서비스 제공, 유학박람회 확대

본 방안 1주기를 맞아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분야별 인재 유치 정책 추진 등으로 전체 유학생 수와 비수도권 유학생 수가 모두 증가하였다.

먼저 라이즈 시범 지역 지자체가 각 지역의 인력 수요와 여건에 맞는 유학생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존의 개별 대학 중심의 유학생 유치 체계가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 ‘부산형 유학생 유치양성 방안(Study Busan 30K Project)’ 등 5개 시도 수립(대구경남 2024. 하반기 수립 예정)

특히 라이즈 시범 지역에서는 지역별 유학생 유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대학-기업 협의체(TF) 구성을 완료했으며, 그 밖에도 지역별 거점 한국어 센터 지정, 지역기업·대학과 연계한 취업박람회 개최(중기부 협업) 등을 통해 유학생의 적응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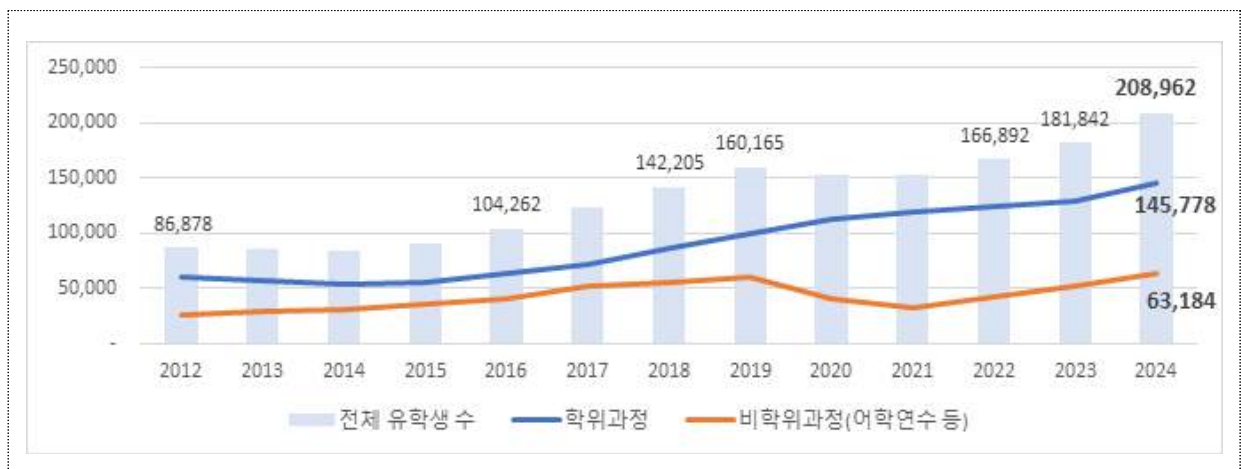
또한 첨단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 사업(GKS)’ 이공계 특화 과정 선발 인원*을 확대(2022. 1,355명 → 2023. 1,600명)하였으며, ‘두뇌 한국(BK) 21 사업’을 통해 외국인 대학원생(2023. 3,953명)을 지원하였다.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을 통해서도 박사급 이상 우수 연구자(누적 2,946명)를 유치하였다.

* 2027년까지 2,700명으로 확대 예정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따라 2024년 유학생은 20.9만 명으로 방안 시행 이전인 2022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특히 지자체가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비수도권의 유학생 수가 증가*하여 수도권 쏠림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비수도권 유학생 수(비율) : (2022년) 69,735명(41.7%) → (2024년) 92,019명(44.0%)

< 2012~2024년 유학생 수 >



지역	2024 유학생 수	2022 대비 증감	증감율	지역	2024 유학생 수	2022 대비 증감	증감율
경북	11,369	4,838	74.1%	광주	6,339	1,263	24.9%
전남	4,700	1,992	73.6%	경남	3,304	632	23.7%
경기	37,683	15,462	69.6%	대전	11,919	2,187	22.5%
강원	5,422	2,177	67.1%	전북	8,036	441	5.8%
충북	5,484	2,194	66.7%	서울	74,488	2,518	3.5%
인천	4,772	1,806	60.9%	대구	5,951	40	0.7%
부산	14,961	4,570	44.0%	세종	1,014	-12	-1.2%
충남	11,262	2,659	30.9%	울산	1,079	-159	-12.8%
				제주	1,179	-538	-31.3%

※ 2022 대비 증감을 순서로 작성

둘째, 유학생 유치 관문 확장 및 유학 저변 확대 등을 통해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 창출을 도모하였다.

전략적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해외 한국교육원에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하였다. 현재까지 7개 한국교육원에 설치되었고 향후 4개 교육원*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에서도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국가별 특성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추가 개발(8→10개국)하고, 세종학당을 2023년 85개국 248개소에서 2024년 88개국 256개소로 확대(문체부)하는 등 해외 한국어교육 보급을 확대하였다.

* (설치 완료) 로스앤젤레스, 오사카, 호치민, 하노이, 태국, 타슈켄트, 알마티
(신설 예정) 시애틀,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셋째,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유학생 유치의 토대를 강화하였다.

지난 8월 법무부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4주기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 개편이 완료되어 이를 바탕으로 유학생 유치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의 개편에도 착수하여 향후 유학생이 유학 준비 단계부터 취업 정보까지 서비스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 4주기(2025~2028)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실태 조사 주요 개편 내용 >

구분	개편 내용
대학·전문대학 역량 분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특성을 반영한 '고등직업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기준 별도 마련 - 일부 지표 전문대학 완화 적용 (등록금 부담률, 중도탈락률)
지역 정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업 취업 지원 강화 - 신입생 어학 능력 기준 점진적 상향 및 입증 방식 다양화를 통해 한국어 교육 강화 유도
평가지표 합리화 및 대학 평가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과정 불법체류율 산식 개선 (분모: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재적 유학생) - 유사 지표 통폐합(성폭력 교육 이수율 등), 상담률 지표 삭제
질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체류 유학생 대상 동영상 강의수업 비율 제한 규정 고려 - 어학 연수 과정 성과 지표 보완 - 법령 위반 대학 제재 강화(1년 → 3년)

정부는 유학생 유치 성과가 취업·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글로컬대학 관련 규제 개혁 주요 추진 과제(요약)

【별첨】 1.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안)

2.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1주기 점검 결과

담당 부서 <총괄>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책임자	과장	나현주	(044-203-7261)
		담당자	사무관	김상덕	(044-203-7265)
		담당자	사무관	김선희	(044-203-7269)
담당 부서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성하	(044-203-6232)
		담당자	서기관	김재극	(044-203-6235)
		담당자	사무관	신태연	(044-203-6237)
		담당자	사무관	김희준	(044-203-6236)
담당 부서 <Study Korea 300K Project>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책임자	과장	신미경	(044-203-6770)
		담당자	서기관	강 현	(044-203-6769)
		담당자	주무관	여정호	(044-203-6796)

붙임

글로벌대학 관련 규제 개혁 주요 추진 과제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대학 간 벽허물기	(현행) 국립대 통합시 타 대학과 동일한 단일 총장 거버넌스 (개선) 대학위원회 + 전체 총장(system office) + 캠퍼스총장 ※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전체대학 (국립대학)
	(현행) 교육대 통합시 단과대학 형태로 편입 (개선) 통합대학을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교-사대 융합) ※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현행) 공립대 통합시 전문학사 일괄 폐지 / 지자체 소유 시설 국립대 캠퍼스 운영 불가 / 통합시에도 공유재산 유지 (개선) 전문학사 동시 운영 / 국·공립 통합 대학에 한해 지자체 시설 국립대 캠퍼스 허용 / 공유재산의 국가재산 이관 허용 ※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추진	
대학-산업체- 연구기관 벽허물기	(현행) 대학원장·단과대학장 주요 보직에 교원만 임명 가능 (개선) 외부 인사 임명 허용(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 도모) ※ 규제 특례를 통해 교육공무원법 적용 완화	글로벌대학 (국립대학)
	(현행) 외부 이사 영입 시 국립대 직원 보수 기준 동일 적용 (개선) 정상급 인사 초빙(임기제) 시 파격적 보수 적용 ※ 연봉 책정 특례 적용 직위분야 지정(공무원보수규정 예외기준)	
	(현행) 겸·초빙교원에 정년 기준(65세) 적용 (개선) 검증된 인사는 정년 기준 예외 부여 ※ 규제 특례를 통해 고등교육법 적용 완화	
	(현행) 겸·초빙교원도 공개채용 절차 필수 (개선) 검증된 인사는 공개채용 예외 부여 ※ 규제 특례를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적용 완화	글로벌대학
	(현행) 대학의 현장실습처 지원 금액 상한(최저임금 25%) 적용 (개선) 공공기관 및 출연연은 지원 금액 상한 미적용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개정	전체대학
	(현행) 계약학과 이동수업은 산업체 보유·임차시설에서 허용 (개선) 계약학과 이동수업 장소를 대학 소유 시설로 확대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고시) 개정(권역 범위 검토 중)	
국립대학의 혁신동력 확보	(현행) 글로벌 사립대만 교직원 인센티브 허용(사업비 5%) (개선) 글로벌 국립대에도 同 기준으로 교직원 인센티브 허용 ※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 개정	글로벌대학 (국립대학)